

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 근로복지분과 회의 결과

I 회의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2021. 7. 26.(월)~30(금) 서면회의 개최
- 참석 : 정책자문위원회 근로복지분과위원 14명(외부 12명, 내부 2명)
※ 의견서 제출 위원 9명(학계 4명, 연구기관 2명, 유관기관, 정책지원, 공제회 각 1명)

II 회의 주제

주제	주요 내용	발제자
여성 건설근로자 취업현황과 정책방안	건설현장 여성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심층 조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향후 진입 및 숙련인력 육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발굴과 사회적 관심 환기	김경희 박사 (한국여성정책 연구원)
건설업 배치전 건강진단 개선방안	배치전 건강진단의 현황 및 개선방안 등	김영기 교수 (부산대학교)

※ 회의자료 붙임2 참조

III 회의 결과

- (주제1) 여성 건설근로자 취업현황 및 정책방안
 - (연구목적) 건설업 여성근로자의 노동현황 및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여 여성 진출 지원 정책방안 및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모색
 - (주요내용) 여성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고용관행 개선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한 정책 마련
 - 비전통적 직종 여성지원법 제정
 - 여성 건설기능인 양성 및 향상 훈련 확대

- 건설분야 여성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
- 여성 건설근로자를 위한 기능향상 교육훈련의 활성화
- 건설기능 직업훈련기관 선정 및 평가시 여성참여 제고를 위한 항목 포함
-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 및 성희롱 예방교육
- 성별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안전보호장비 제공
- 직업상담사 성인지 교육 및 여성 건설노동자 고용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

< 정책자문위원 주요 검토의견 >

1. 이복남

- 국내 실태 조사·분석에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고 제시한 정책방안이 여성근로자를 위한 성희롱과 현장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여성근로자를 양성 근로자로 대체하면 활용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
- (연구 내용에 추가 제안 사항) ①기술혁신으로 인한 근로자의 양과 직무 수요, ② 여성근로자에게 유리한 직종 집중 양성하는 직업학교 개설 등, ③여성근로자를 건설현장으로 유인하는 정책개발, ④기술혁신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직종 예측, ⑤소득수준과 여성근로자 비중 및 임금의 상관관계 조사연구 등

2. 남석인

-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라 판단되며 제시한 정책과제 모두 적극적인 제도화가 필요
-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문제는 엄중한 대처 방안이 제시되면 좋겠음

3. 김세영

-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남성을 위주로 이루어졌고, 취약 계층으로 볼 수 있는 여성 노동자나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드문 편으로 중요한 연구로 생각됨
- 현장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후속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, 성인지 교육 확대와 고용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

4. 안홍섭

- 건설기능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국인 기능인력 유인 정책은 시급한 과제이며,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가치 있는 연구라 생각됨
- 여성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계획에는 직종별 수요와 여성 근로자의 적합성도 함께 검토하여 진입이 유리한 직종부터 시작하여 입직 분위기를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
- 이미 재교육, 교육비 보전 등 많은 교육비 보전 제도들이 있으므로 교육비는 다른 참가비 수준으로 무료로 할 것을 제안함(시설보조금 등 필요성이 낮은 비용 전용)

5. 현석호

- 노동조합이 기능학교를 통해 일부 직종에 대해 기능훈련을 진행하고 있고, 공제회

및 유관기관 지원하에 여성노동자를 양성하고 있지만 훈련비 지원이 10년째 동결되어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

- 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차별금지조항 및 보건휴가 등 단체협약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리어 여성노동자의 건설업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존재하여 여성노동자 관련 법, 제도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

6. 길현종

-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, 관련 이슈는 법률제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‘비전통적 직종 여성지원법’이 법률제정 자체로 목적을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고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여성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

7. 신영철

- 제시된 ‘비전통적 직종 여성지원법’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여성근로자의 취업이 증가한 이유와 산업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사회구조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법률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됨
- 여성근로자 취업자수 증가는 최근 민간건축부문의 양적팽창으로 노동인력 수요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민간건축부문의 감소 및 공장제작 방식의 확산 등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8. 임광빈

- 연구가 제시하는 정책들이 제도화된다면 여성근로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, 더불어 기존 건설업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인적, 물적인 안전에 관한 연구와 건설업 종사 여성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

9. 심규범

- ‘비전통적 직종 여성지원법’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며, 여성 건설기능인 양성 및 향상 훈련 확대의 구체화가 필요함
- 성별을 고려한 편의시설 및 안전보호장비 제공 관련하여 구체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, 개인별 맞춤 공급을 위해서는 초기업단위의 기금을 조성하고 물품의 수명에 따른 주기적 공급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□ (주제2) 건설업 배치전 건강진단 개선방안

- (연구목적) 건설업 일용노동자의 ‘배치전 건강검진’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노,사,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
- (주요내용) 배치전 건강검진 개선 방안

- (건설일용직 등록제 도입) 건설근로자 DB를 구축 후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요자와 공유
- (건설업 검진 도입) 현행 배치전, 특수건강진단은 건설업 특성에 맞지 않아 건설업 검진 신규 도입

< 정책자문위원 주요 검토의견 >

1. 이복남

- 병원 간 건강검진 결과 공유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며,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관리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건설근로자카드에 건강검진기록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함
-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안전특별법 대비 일용직근로자의 건강검진이 필수임을 사용자에게 사전 예고하는 방안을 연구에 포함시키면 좋겠음

2. 남석인

- 취지는 공감하나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구체성이 다소 미흡해 보임
- 건설근로자의 노동권 및 건강권에 더 초점을 맞출 경우 실효성 있는 제언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과정에서 공제회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

3. 김세영

- 추후 초기업단위, 산업체 단위에서 건설업 일용직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건강검진 비용문제의 제3자 지불제접근 및 사후관리 영역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, 여기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4. 안홍섭

- 수검 여부, 중복검진 등 현황파악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린카드 등 기존 신분증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, 필요시 민원서류처럼 언제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조치하여 결과 수령시간 단축할 필요가 있음
- 진단 비용은 전액 무료로 국가가 부담
- 제조업, 정규직 대상 기존 제도는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건설근로자에 적합하게 법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적극 동의함

5. 현석호

- 배치전 건강검진은 사측이 채용배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, 비용부담 주체가 사측임에도 건설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
- 배치전 건강검진이 사측의 채용배제의 근거로 되지 않고 노동자의 건강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측에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안전보건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

6. 길현종

- 본 주제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현재의 노동 시스템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

- 서도 어떻게 이의 목적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? 라고 생각함
- 제시한 여러 대안 중 일부를 대형 공공사업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

7. 신영철

- 배치전 건강검진제도는 제조업의 정규직 위주의 제도로 건설업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제도적 접근보다는 업종별 접근방식이 불가피함
- 발제자가 제안한 바처럼 공공기관이 건강검진 자료를 관리토록 하는 것은 필요
- 건설업 검진 도입 방식이 타당해 보이나 단점이 하나에 불과한 것은 실행에 큰 지장이 없다는 주장인지 명확한 언급이 필요함

8. 임광빈

- 건강진단을 통해 현장작업자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①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등록하는 효과, ② 자신이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, 건강영향은 무엇인지,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받는 효과, ③ 검사결과 이상소견 초기 발견시 악화 방지 효과, ④ 정기적인 검진과정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통한 인식 향상, 이에 따른 작업습관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

9. 심규범

- 건강진단 비용 확보 방안에 공감하며 건강진단 참여 유도 방안 및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구체적 역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